

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

경제주평

Weekly Economic Review

-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
-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개혁 필요

목 차

■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

-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개혁 필요

Executive Summary	i
1. 개요	1
2. 부문별 성장추세와 경기변동	2
3. 종합평가	10
4. 시사점	15

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 관 : 주 원 이 사 대 우 (2072-6235, juwon@hri.co.kr)

산업연구실 : 김 천 구 선 임 연 구 원 (2072-6211, ck1009@hri.co.kr)

Executive Summary

□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

- 성장력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개혁 필요

■ 개요

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.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이 장기적인 성장 요인인지 경기변동 때문인지에 따라 정책 당국의 대응이 달라진다.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을 추세 요인과 순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

■ 부문별 성장추세와 경기변동

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%대 중반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3%대 중반까지 하락하였고, 경기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다.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**민간소비**는 소득정체, 고령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현재 2%대까지 하락하였으며, 경기는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. **정부소비**는 추세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경기는 수축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. **설비투자**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4%대를 유지하고 있으며, 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해 있다. **건설투자**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대로 하락한 반면, 경기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확장국면을 나타내고 있다. **수출**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, 수출의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. **수입** 역시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,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다.

■ 종합평가

최근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것에 기인한다.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추세성장률과 경기순환상 특징을 살펴보면 ① 최근 국내총생산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주된 원인이다. ② 공공 부문(정부소비+정부투자)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문에 치중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. ③ 국내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. ④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내수 부문의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볼 때 국내 경기회복의 동력 마련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.

■ 시사점

첫째,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. **둘째**,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. **셋째**,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. **넷째**, 수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 개척, 비가격 경쟁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. **다섯째**, 정부의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R&D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. **여섯째**,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.

1. 개요

○ (연구배경)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,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하락이 장기적인 성장 요인인지 경기변동 때문인지에 따라 정책 당국의 대응이 달라짐

- 한 국가의 경기 지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순환으로 나눌 수 있음

- 자본축적 증가, 노동인구 증가, 기술진보 등 장기적인 변화가 경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성장추세에 영향을 미침
- 경기순환은 단기적으로 장기 추세성장을 중심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을 의미

- 경제의 성장과 둔화 원인이 장기적인 성장추세 때문인지 단기적인 경기변동인지에 따라 정책 당국의 경기 대응도 달라짐

- 현재 성장 둔화가 경기국면상 수축이 원인일 경우 통화, 재정정책 등 단기적인 처방이 효과적일 수 있음
- 반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둔화가 나타날 경우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

○ (연구목적)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을 추세 요인과 순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

- 본 연구에서는 장기 추세와 경기변동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봄

- 기존 연구들은 경제 전체의 장기 추세성장치로 잠재성장률을 산출하거나, 경기순환주기만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임

- 추가적으로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분해하여 각 부문별 성장의 장기추세와 경기변동을 살펴봄

- 국민계정의 지출항목별은 민간소비, 정부소비, 설비투자, 건설투자, 수출, 수입 등으로 구분

2. 부문별 성장추세와 경기순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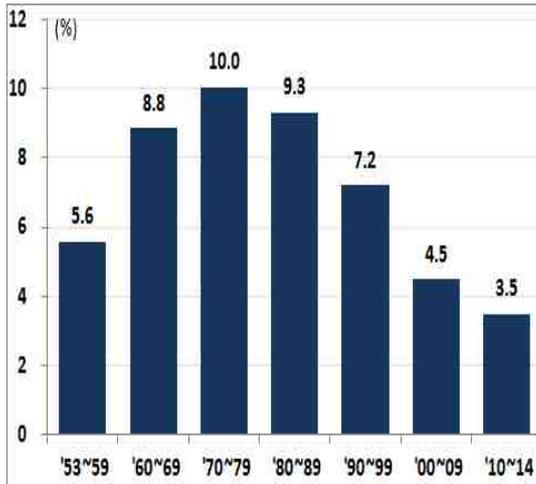
○ (분석방법)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성장추세와 경기순환으로 구분하여 장기적인 성장과 단기적인 경기 국면을 분석

- 국민계정의 지출항목별 생산을 성장추세와 경기순환으로 나누어 분석
 - 국내 생산의 증가는 장기적인 추세 성장과 단기적인 경기변동으로 나눌 수 있음
 - 국내총생산, 내수(민간소비, 정부소비, 설비투자, 건설투자), 외수(수출, 수입)의 장기적인 측면인 추세성장률과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나누어 비교
 - 분석 기간은 2000년 1/4분기부터 2015년 2/4분기까지이며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별 GDP의 연간 및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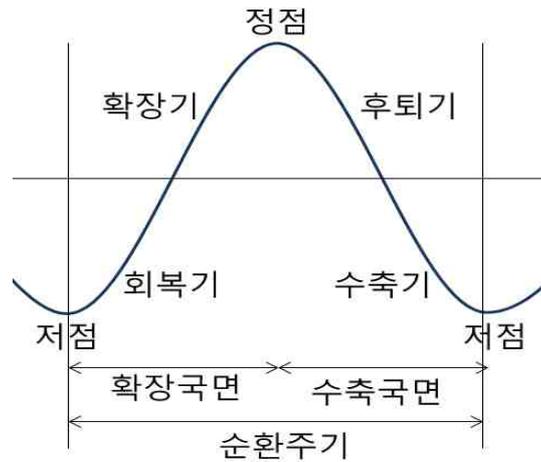
- 장기 추세성장률은 경제의 장기적인 개선에 영향을 받음
 - 경제의 추세성장률은 장기균형 상태를 의미
 - 장기 추세성장은 경제의 장기적인 개선에 의한 효과로 자본축적 증가, 노동인구 증가, 기술진보 등 장기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
 - H-P(Hodrick Prescott)필터링 방식을 이용하여 경제의 부문별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산출

- 부문별 경기순환은 경제적 충격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추세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
 - 경기순환이란 부문별 실제생산이 장기 추세성장보다 높고 낮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냄
 -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가계 및 기업들의 지출 변화와 같은 총수요 충격, 통화량 변동과 같은 화폐 충격, 기술·생산성 변화와 같은 총공급 충격, 해외 부문의 충격이나 정치적 변수 등 복합적임
 - 경기의 순환변동치는 실제성과 추세성장의 차이로 정의하며 원계열을 계절조정된 이후 H-P필터를 이용하여 추세치를 제거하여 작성한 수치

<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 기간평균 >



< 경기의 순환과정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
주 :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동일한 개념.

○ (국내총생산) 국내총생산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3%대 중반까지 하락하였으며,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

- 국내총생산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감소,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 추세성장률이 현재 3%대 중반으로 하락

-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%대 중반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3%대 중반까지 하락
- 특히 최근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2~3%를 유지하고 있어 추세성장률은 당분간 하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

- 국내총생산의 경기순환 역시 수축국면에 진입

- 국내총생산의 경기순환은 현재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접어들어 전반적으로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음
-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었음
- 과거 국내총생산의 순환변동치는 진폭과 변동성이 컸던것에 비하여, 최근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는 회복기에도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회복과 수축국면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음

<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국내총생산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○ (내수) 정부소비,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하향세가 뚜렷하며, 내수 경기는 설비투자, 건설투자는 회복국면인 반면 민간소비는 수축국면

- 추세성장률 : 민간소비는 소득정체, 고령화,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현재 2%대까지 하락
 - 민간소비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 약 4.5%에서 2014년 2.4%까지 하락
 -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, 노후불안,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으로 성장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됨
 - 민간소비의 실질성장률은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추세성장률 보다 낮으며 민간소비 추세성장률 하향압력 역시 커지고 있음
- 경기순환 : 민간소비의 순환변동치는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음
 - 민간소비의 순환변동치는 수축국면에 진입한 이후 아직까지 회복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
 - 최근 주택시장 호조, 저물가 등은 가계의 소득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, 메르스와 경기회복 속도 미진 등이 가계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간소비의 수축국면이 장기화

- 민간소비의 순환변동치 진폭이 작아지고 경기순환의 불황과 호황의 변화 관찰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순환이 반복되고 있음

< 민간소비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민간소비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- 추세성장률 : 정부소비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추세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정부소비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 약 4.7%에서 2014년 4.4%로 변동하여 과거와 유사한 수준
 - 정부소비는 저출산,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비용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소비의 추세성장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경기순환 : 정부소비의 경기는 최근 수축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
 -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정부소비는 현재 수축과 회복을 짧은 주기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
 - 2008년과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다른 부문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비교적 정부소비 증가율이 높았음

< 정부소비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정부소비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- 추세성장률 :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4%대를 유지
 - 과거 10~20%대를 유지하던 설비투자의 추세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여 3%대 중반까지 하락
 - 설비투자의 추세성장률은 2014년 4.0%로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- 설비투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성장률은 서비스업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에 기인
 -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평균 생산 증가율(4.2%)은 서비스업 평균 생산 증가율(2.9%) 보다 높았으나,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 평균 투자 증가율(-0.6%)은 서비스업 평균 투자 증가율(3.7%)보다 크게 낮았음
 - 제조업의 경우 과거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화학, 기계, 운송장비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투자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, 신규 투자를 이끌만한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

- 경기순환 : 설비투자 경기는 회복국면을 나타내고 있음
 - 설비투자의 순환변동치는 저금리 기조 등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의 영향으로

현재 확장국면에 진입해 있음

- 설비투자는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성이 매우 큰데 최근에는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때 반등의 힘이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함

< 설비투자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설비투자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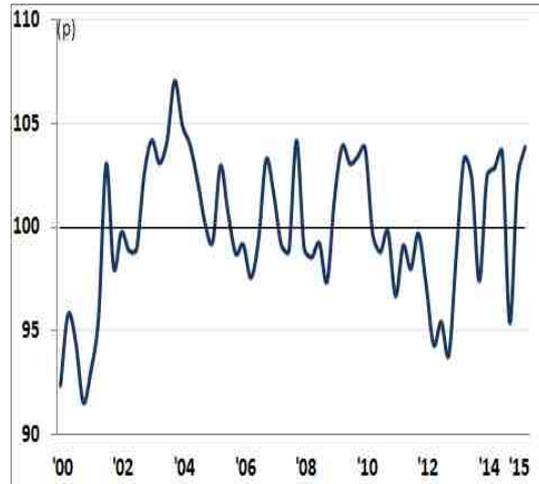
- 추세성장률 : 건설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대로 하락
 - 건설투자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 1.8%에서 2014년 -0.5%까지 하락
 - 건설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수년간 부진을 거듭하며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음
 - 다만 최근 건설투자의 실질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세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음
- 경기순환 :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건설투자 경기는 확장국면을 나타내고 있음
 - 건설투자의 경기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현재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진입하고 있음
 - 최근 수년간 건설투자 경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

< 건설투자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건설투자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○ (외수) 과거 높은 성장을 유지하던 수출과 수입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, 경기순환 역시 수출, 수입 모두 수축국면에 빠져 있음

- 추세성장률 :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됐던 수출¹⁾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
 - 2000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높은 성장을 유지하던 수출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14년 7.9%까지 하락
 - 수출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세계 교역구조 변화, 중국의 성장둔화 및 수입구조 변화,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등에 기인
- 경기순환 : 글로벌 유효 수요 부족,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등으로 수출 경기 역시 수축국면에 진입
 - 수출의 경기순환은 현재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접어들며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음

1) 수출입 통계는 통과 기준, 국제수지 기준, 국민계정 기준 등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,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국민계정 수출입 통계를 사용.

- 금융위기 이후 V자로 반등한 수출의 경기순환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둔화되며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
-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경쟁 강화,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 회복세 미약 등으로 단기적으로 수출이 급락

< 수출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수출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- 추세성장률 : 200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수입의 장기 추세성장률도 최근 빠르게 감소
 - 수입의 추세성장률은 민간소비 둔화, 수출 성장성 위축 등으로 2000년 8.5%에서 2014년 6.3%까지 하락
 - 소득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, 노후불안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은 수입의 추세적인 둔화로 이어짐
 - 수출 증대가 수입 증대를 유발하는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수출의 성장률 둔화 역시 수입 감소로 이어짐
- 경기순환 : 수입 경기 역시 수축국면에 진입
 - 수입의 경기순환은 현재 후퇴기에서 수축기로 접어들며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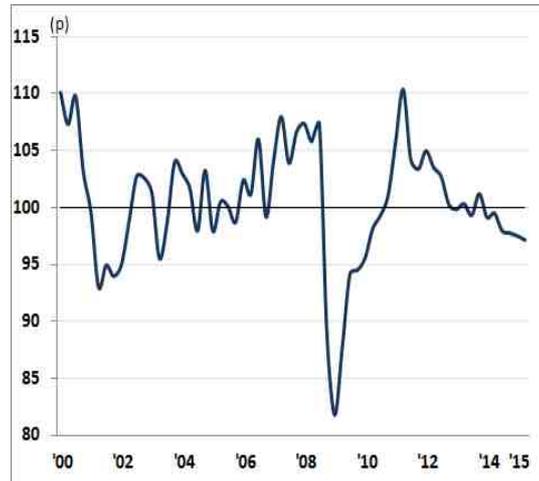
- 소비심리 악화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의 해외 수입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
- 향후에도 수입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, 수출 등이 동반 침체에 빠져 있어 수입은 당분간 수축국면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임

< 수입의 실질성장률과 추세성장률 >



자료 :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2015년 실질성장률은 상반기 기준.

< 수입의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3. 종합평가

-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것에 기인

1) 장기 추세성장률(장기적 측면)

- 최근 국내총생산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주된 원인

- 민간소비, 건설투자, 수출 등의 성장세 둔화가 국내총생산의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

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

- 민간소비는 금융위기 이전(2000~07년) 장기 추세성장률 기간평균이 약 3.6%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(2010~14년) 2.5%로 약 1.1%p 감소하였으며 수출 역시 동기간 11.4%에서 8.1%로 3.3%p 감소
 - 건설투자는 최근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등 잠재성장력이 크게 훼손
 - 반면 설비투자, 정부소비 등은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한 4%대의 추세성장을 유지하고 있음
- 특히 민간소비, 수출, 건설투자 등의 경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
- 민간소비는 2010~14년 평균 GDP대비 50.4%, 수출은 GDP대비 53.2%, 건설투자는 GDP대비 9.1%임

< 국내 경제의 지출항목별 장기 추세성장률 >

			추세성장률 기간평균		
			2000~07년 (A)	2010~14년 (B)	차이 (B)-(A)
국내총생산			4.7%	3.5%	-1.2%p
내 수	최종소비지출	민간소비	3.6%	2.5%	-1.1%p
		정부소비	5.1%	4.5%	-0.6%p
	총자본형성	설비투자	3.8%	4.1%	0.3%p
		건설투자	1.2%	-0.5%	-1.7%p
		지식재산투자	8.0%	6.5%	-1.5%p
외 수	수 출	11.4%	8.1%	-3.3%p	
	수 입	8.4%	6.5%	-1.9%p	

주 : 1) 금융위기 기간인 2008, 2009년은 분석에서 제외.

2) 총자본형성은 설비투자, 건설투자, 지식재산투자 이외에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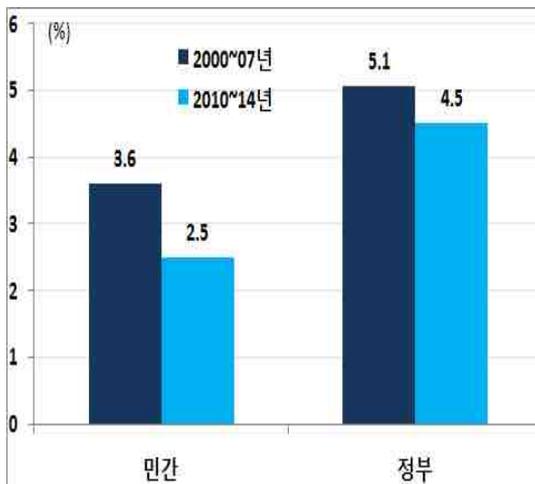
○ 공공 부문(정부소비+정부투자)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문에 치중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

- 소비의 경우 민간소비의 추세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, 정부지출의 추세증가율은 4%대 중반 수준을 유지
 - 민간소비는 소득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, 노후불안,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세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
 - 반면 정부지출의 경우 저출산,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

증가 등으로 사회비용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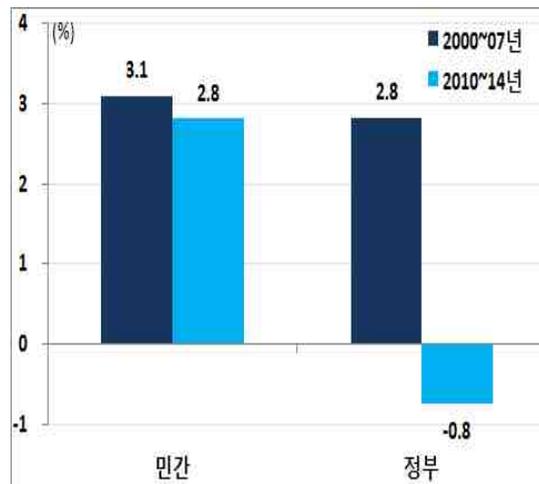
- 투자의 경우 정부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추세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한 반면 민간 총고정자본형성의 추세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
 -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 추세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2.8%에서 금융위기 이후 -0.8%로 급락
 - 반면 민간의 총고정자본형성 추세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3.1%에서 금융위기 이후 2.8%로 유사한 수준
 -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늘어난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사회적 접자본의 신규투자를 축소할 영향으로 판단됨
- 투자 증가는 직접적 경로 이외에 간접적 경로로 기업생산과 소비 증가를 유발하므로 경제회복 동력 마련에 중요
 - 투자의 생산유발계수²⁾는 2013년 기준 2.083으로 수출 1.991, 소비 1.699 등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음
 - 투자 확대→기업의 생산 및 고용 증대→소비 증가 등의 경로를 통해 경제의 영향을 미침

< 민간소비, 정부소비 추세성장률의 금융위기 전후 비교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
< 민간 및 정부 총고정자본형성 추세성장률의 금융위기 전후 비교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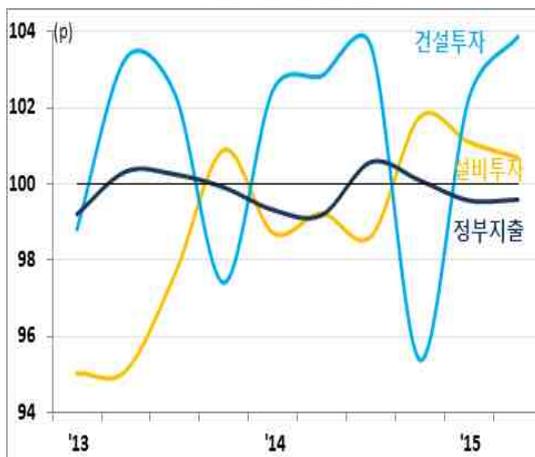
2) 최종적으로 한 단위의 수요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.

2) 경기순환(단기적 측면)

○ 국내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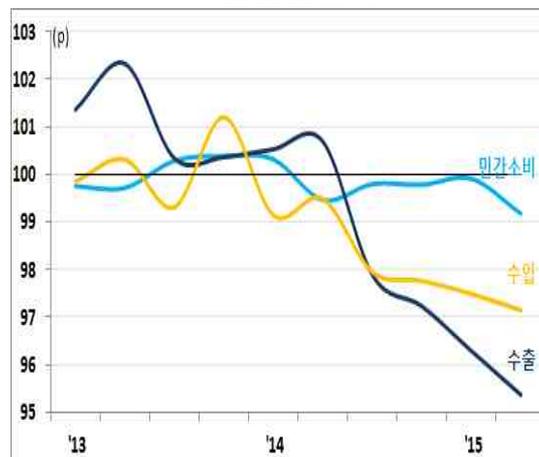
-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확장국면이며 정부소비 역시 회복기에 접어들음
 - 설비투자, 건설투자 등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통화 및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확장국면에 진입해 있음
 - 설비투자, 건설투자, 정부소비가 증대한 것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(저금리 기조 등 금융완화 정책, 재정 확대 정책 등)에 의존한 바가 큼
 -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던 정부소비 역시 최근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추경 집행으로 회복의 힘은 더욱 강해질 전망
- 반면 민간소비, 수출 등은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
 - 정부의 단기적 노력으로 회복이 어려운 민간소비, 수출, 수입 등은 부진이 장기화되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아직 소비와 수출 등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
- 과거 외환위기 및 카드사태 이후 수출주도형 회복, 2000년대 초반 내수(민간소비) 주도형 회복)과 달리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이 나타남

< 설비투자, 건설투자, 정부소비의 최근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 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 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< 민간소비, 수출, 수입의 최근 순환변동치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 주 : 1) 순환변동치=(1+(실제성장-추세성장)/추세성장)×100로 정의.
 2) 기준점인 100p에서 1p만큼 변화는 추세성장에서 1%만큼 벗어남을 의미.

3) “경기 회복기의 선순환 정착 과제“, 현대경제연구원(2002).

○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내수 부문의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볼 때 국내 경기회복의 동력 마련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

- 부문별로 민간소비, 설비투자의 경기변동성이 크게 감소
 - 경기변동성은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로 정의, 표준편차는 평균에서 개별 관측치의 평균적인 차이를 의미하며 표준편차가 클수록 변동성이 높음
 - 민간소비의 경기변동성을 추정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 약 2.2p에서 금융위기 이후 0.5p로 하락하였음
- 현재와 같이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추세성장률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변동성 축소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⁴⁾
 -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성 축소는 경제의 안정성 제고 및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
 - 반면 현재와 같이 경기변동성 축소가 내수 부문의 위축과 구조적 변화가 원인일 경우 향후 경기 모멘텀 확보와 성장잠재력 확충이 어려워짐
- 민간소비,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경기의 확장과 수축국면이 불분명해지고 경기순환 국면이 짧아지고 있어 정책 당국의 경기조절 의사결정이 어려워짐
 - 정부가 회복과 수축에 대한 경기판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대응이 어려워짐
 - 내수부문의 짧아지고 있는 경기 순환 국면으로 경기판단과 집행시점에 시차를 가지는 재정정책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

< 부문별 순환변동치 표준편차 >



자료 :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.

4) “우리 경제의 경기변동성 축소 원인과 시사점”, 한국은행(2014).

4. 시사점

첫째, (구조전환)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

-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을 신속히 완수하여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
 -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
 -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,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임
- 새로운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
 -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노력 경주, 제조업 국내 유턴 유인, 관광·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
 - 산업계 내부적으로는 기존 주력 제품의 품질, 디자인,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
 - 또한 생명과학, 신소재, 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신산업의 기반 육성, 경쟁력 강화, 기술 표준 선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필요
-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
 - 다수 부처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'덩어리규제' 등은 범정부 차원의 '규제감축 로드맵'을 작성하여 과감한 감축 내지는 관리가 필요
 - 규제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편익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
 - 정부와 기업 간 '규제유연화 협약제도'를 도입하는 등 특정 규제와 산업현장과의 괴리 발생 시 해당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둘째, (소비)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요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

- 적기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-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내수의 구조적 부진 현상을 예방

셋째, (투자)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

- 투자여력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
 -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투자 활동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
 - 저부가·저기술에 집중되었을 경우 투자와 자원을 고부가·고기술 부문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임
 - 금융위기 이후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장치 산업의 미래인 투자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「투자→생산→이윤→재투자」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할 것임
- 정부소비와 비교하여 미흡하였던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
 - 노후인프라 정비,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,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등으로 도시 경관·안전을 개선하고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
 -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공투자관리체계 확립이 중요

넷째, (외수) 수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환율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 이외에 신시장 개척, 비가격 경쟁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

- 신시장 개척 및 FTA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
 -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 활로 개척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 중인 ASEAN 및 중동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이 요구
 -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 및 기업들 간 공조 체제가 활성화 될 필요
- 엔화,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로 인한 일본, 유럽으로의 수출 부진은 제품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, 품질, 문화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대응
 - 일본, 유럽 등 지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이 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R&D 제고를 통해 세계 선도제품 개발에 나설 필요
 - 해외시장 개척능력이나 환율 변동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

다섯째, (생산성) 국내경제의 물량투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R&D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

- 정부 차원에서의 지식재산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, 특히 대규모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산업과 기초과학기술을 육성
 -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기술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R&D 투자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함
 - 이를 위해 산학연 R&D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
 - 정부의 R&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함께 민간의 응용기술과 역할분담을 감안해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
- 합리적인 R&D 투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확보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R&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
 - 시장 수요에 따르는 국가 R&D 사업의 탄력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,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&D 투자를 확대
 - R&D 예산 지원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

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

- 또한 R&D 투자를 통해 생산된 기술이 효과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 체계를 개선

여섯째, (정책효율성)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

- 경기 상황에 맞는 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판단지표 개발이 필요
 -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기판단지표,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의사결정행태를 잘 반영하는 현실 밀착형 생활지표들을 적극 발굴하여 경기판단에 이용
- 정책당국의 경기대응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

김천구 선임연구원 (2072-6211, ck1009@hri.co.kr)